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국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23.1.27.)



새로운 위협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BI 소개

위의 5개의 원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및 중앙부처-지자체-경찰-소방-국민 등 다양한 주체를 의미하며,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받들겠다는 의미입니다.

Contents

01	추진경과	01
02	비전 / 목표 / 기본방향	02
	전략1. 새로운 위협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03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04
	전략3.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05
	전략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06
	전략5. 민간 참여와 협업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07
03	실천 계획	08

01 추진경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TF」를 구성하고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 (국정조사),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종합대책 수립 경과

- 이태원 참사 발생('22.10.29.) 및 사고 수습
-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22.11.7.)
-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TF」 발족* 및 활동('22.11.18.~)
 - * ①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② 지역 역량 강화 ③ 과학 기반 재난안전
 - ④ 제도개선·안전문화의 4개 분과로 구성
- 장관 주재 TF 분과별 추진과제 보고('22.12.12., 12.14.)
- 장·차관 주재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전체회의 및 합동 토론회
 - * <전체회의> 1차(11.18.)·2차(11.25.)·3차(12.1.)·4차(12.15.)·5차(12.22.)·6차(12.30.)
- 분과·주제별 전문가 자문회의('22.11월~12월, 총19회)
- 각종 의견수렴 및 협의
 -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22.11.15.~12.31.)
 - * '안전신문고'(1,672건) 및 'ON국민소통'(220건)을 통해 의견수렴(총 1,892건)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및 의견 반영('22.11.24.~'23.1.17. 55일간)

02 비전 / 목표 / 기본방향

비전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목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27년 10만명당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0명내 감축*
* '19년 기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OECD 평균 22.1명 / 한국 26.2명

	「관점」 전환	「방식」 전환	「행동(실천)」 전환
기본방향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과학 기술 기반, 쉼 사회 구성원 참여	온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

- 5대 추진전략**
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3.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전략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선례 없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예측과 대비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후대응, 복구 중심 안전관리

- 재난의 예측과 예방보다는 사고대응과 수습에 집중



사전 예측과 예방중심 선제적 안전관리

- 새로운 위험요소의 발굴·예측을 통한 대비 강화

● 대표과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구성·운영

- 위험요소 발굴·평가·선정 등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 마련



범정부 위험관리체계 구축

- 국가단위, 지역단위로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대응체계 구축



현장인파 관리시스템 도입

- 유동인구 밀집도 상시 수집·분석, 위험 감지 시 자동으로 상황전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비

- (기후위기) 예보역량 제고 및 예방 인프라 보강
- (디지털 재난) 통신장애 대비 기능 연속성 확보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경찰·소방의 역량과 협력체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장 대응 역량의 한계

- 현장의 재난안전 권한과 역량 부족
- 지자체-경찰-소방 공동 대응이 필요한 복합재난 대응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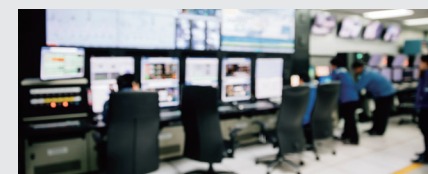
현장대응기관의 총체적 대응역량 개선

-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 지자체-경찰-소방 공동대응력 제고

● 대표과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 지자체 상황실 상시운영('22년 228개 중 49개 → 전 시군구)
- 2027년까지 지능형 CCTV 통합 관제로 변경



지자체 재난관리 권한·역할 강화

- 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권한 부여
-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본격 시행



재난관리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개선

- 최일선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강화
- 지자체 안전 조직·인력 지속 보강



현장에서 작동하는 훈련과 매뉴얼

- 신종·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 실시
- 모바일 기반 디지털·원페이지 매뉴얼





STRATEGY 3

전략3.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재난안전관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바꾸고,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경험 중심 재난관리

- 신기술 적용 부족, 분산된 시스템 등 한계로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재난관리
- 과학적 재난관리의 제한적 도입 (수습·대응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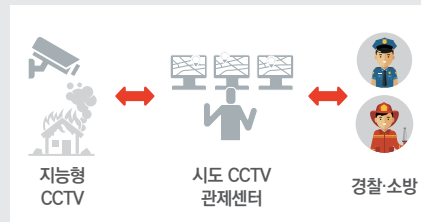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로 디지털 전환

-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데이터의 연계·통합·활용 강화
- 예측·예방 단계 등 재난관리 초단계에 과학적 재난관리 도입

● 대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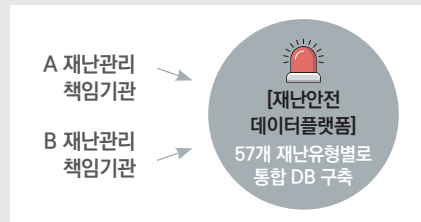
ICT 기반 사전 예측적 재난관리 시스템

- 지능형CCTV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측·감지-모니터링-조기경보 체계 구축 (지진, 산사태, 산불 등)



재난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

-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 198개 시스템에 대한 통합 DB 구축으로 57개 재난유형별 데이터 관리



대국민 재난안전 서비스 [국민안전 24]

- 재난예방부터 피해지원까지 「국민안전24」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



STRATEGY 4

전략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재난 피해 지역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한층 강화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공급자 중심 지원, 사각지대 발생

- 개별 법령·제도별 지원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 발생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개인·공동체 맞춤형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종합적인 복구지원 및 피해지원 내실화
-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대책 강화

● 대표과제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재난피해 피해지원금 상향 (예시) 주택복구 지원금 상향 (전파 기준 16백만원 → 최소 20백만원~36백만원)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복구 지원근거 마련 (예시) 생활 인프라 정비+소통 회복+지역 경제 활성화 등



노약자·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예시) 사고다발지를 분석하여 집중 점검 → 인프라 개선



재난 안전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산

-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 관계 없이 누구나 쉽게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피·탈출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 정비





STRATEGY 5

전략5. 민간 참여와 협업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몸으로 배우고, 스스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전제일 문화를 확산합니다.

형식적 교육 훈련, 생활 속 실천 부족



자율적 실천 기반 안전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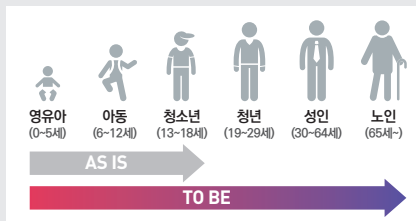
- 일부 연령층(학생) 대상 교육, 형식적 훈련
- 우리 사회 내 안전불감증과 안전무시 관행 여전

- **전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 필수안전교육**
- **국민참여 안전신고·제안 등 안전문화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 확대**

● 대표과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

- 연령대별로 체험형 필수 안전교육 제공
- '1시도 1안전체험관' 등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자발적 참여 기반 안전문화확산

- 안전신문고, 온국민소통 등을 통해 안전신고, 정책제안 활성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

- 민간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유도 (예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사회공헌협약 확산 등



03 실천 계획

이행관리 및 점검



점검체계

- 행정안전부 내 전담부서(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 등을 통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이행점검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점검(격주), 안전회의체 활용 점검체계 가동* 등 철저한 이행점검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 장관),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활용

※ 필요시 이행현황 및 실적 수시점검

대국민 소통



웹페이지 운영

- 국민들께서 동 대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용 웹페이지*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설치, 수시로 정보 현행화

국민 의견수렴 강화

- 국민들이 직접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 운영

▶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 ON국민소통(www.onsotong.go.kr)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인쇄일 | 2023년 3월

발행일 | 2023년 3월

발행처 | 행정안전부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전화 | 02-2100-3399
